

[서식 예] 증인신청서(항소심)

## 증 인 신 청 서

사 건 20○○나○○○○ 손해배상(기)

항 소 인(원고) ○○○

피항소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2.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은 원고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원고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원고의 아들인 소외 박●●와 함께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의 처와 피고의 모가 원고의 병실을 찾아왔을 때 원고의 병실에 함께 있었음.

#### 3. 입증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

#### 4. 증인신문사항(별첨)

20○○. ○. ○.

위 항소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증인 ■■■ 신문사항

1. 증인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아知道吗?
2. 증인은 이 사건 항소인의 부상이후 소외 박●●와 함께 피항소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
3. 그 때 피항소인의 집에는 피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처, 피항소인의 어머니가 있었지요?
4. 소외 박●●가 ‘우리 어머니(항소인)는 현재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자, 피항소인은 ‘살짝 밀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면서 사과하고, 치료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지요?
5. 증인은 항소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피항소인의 처와 피항소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항소인을 병문안하러 찾아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6. 기타 관련 사항.

제 출 법 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신 청 기 간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 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
제 출 부 수	<p>신청서 1부</p> <p>※ 증인신문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p>		
증 거 조 사 비 용	<p>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위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위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77조).</p>		
기 타	<p>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본문)</p>		
	<p>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p>		
	<p>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확정된 중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7호).</p>		
	<p>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93조).</p>		
	<p>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음(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p>		